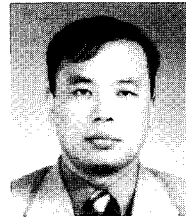


건축물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



동재욱 | 국립전안공업대학 교수



조선호 | 서울소방학교 전형팀장

I. 들어가는 말

현대사회는 변화의 요체로서 정보를 고도로 이용하여 고도산업사회에의 도달을 촉진함과 더불어 인간의 자유와 창의성, 자기실현을 동시에 극대화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이며 이는 전통적 생산요소인 토지와 노동 그리고 자본만으로는 생산요소의 효용가치 극대화가 한계에 이르렀으며 앞으로는 지식과 정보를 부가가치 창출의 근원으로 인식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지식과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고도산업사회의 달성을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제가 안전이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은 일찍이 그의 저서 『위험사회(1986)』에서 현대사회를 문명의 화산위에서 살아가는 위험사회(Risiko Gesellschaft)로 정의하고 위험이 평상적 지각범위를 벗어나고 산업의 논리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면서 현대 산업사회는 위험사회로 이행된다고 주장하였다.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예상하기 힘든 대형 자연재해, 끊임없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등의 요인은 지역과 대상, 시간 등 모든 것을 구분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다. 테러나 전쟁, 살인, 폭력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이러한 위험요소

에 인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는 그간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자연재해를 제외하더라도 우암상가 아파트 붕괴(1993. 1. 7), 구포열차 전복(1993. 3. 28),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1993. 7. 26), 서해페리호 침몰(1993. 10. 10), 성수대교 붕괴(1994. 10. 21),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1994. 12. 7), 대구도시가스 폭발(1995. 4. 28), 삼풍백화점 붕괴(1995. 6. 29), 강원고성 산불(1996. 4. 23), KAL기 팜추락사고(1997. 8. 6), 씨랜드 수련원 화재(1999. 6. 30), 인천호프집 화재(1999. 10. 30), 군산 개복동단란주점 화재(2002. 1. 29), 대구 지하철화재(2003. 2. 18), 청도 대흥농산 화재(2003. 12. 17) 등 끊임없는 대형사고를 당하였다. 이러한 사고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그 원인을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스스로 진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적지 않게 있었다. Kingdon(킹돈)이 말한 것처럼 정책의제화(Agenda Setting)가 용이한 사회문제에 대한 양대점화장치(triggering device)로서의 극적 사건(event)과 위기(crisis)가 우리사회와 정부를 강하게 자극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정부는 재난관리법(현, 재난및안전관

리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소방법은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거쳐 2004년도부터 4개법으로 분법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괄목할 만한 것은 2004. 6. 1 행정자치부의 외청으로 안전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신설된 소방방재청의 출범이다. 이러한 정부차원에서의 일련의 제도적, 정책적 결과물들과 아울러 민간부문에서도 새로운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공공부문보다도 앞서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매우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건축물과 관련된 크고 작은 사고를 수없이 겪으면서 깊은 반성과 새로운 각오를 다져왔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고당시의 탄식에서 과감히 벗어나 발전적인 차원에서의 안전관리를 접근할 시기가 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축물 안전관리 실태를 반성적 시각에서 점검해보고 정부와 민간부문 공히 서서히 싹트고 있는 안전관리의 새로운 동향을 중심으로 미래지향적인 패러다임에 대하여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논의해 보고자 한다.

II. 건축물 안전관리실태의 반성적 고찰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안전관리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양 자책하면서 반성하였던 것만큼 그리 낮은 것도 아니다. 다만, 타 분야에 비하여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현장에서는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보다 더 나은 발전을 추구한다는 입장에서 건축물 안전관리원칙상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반성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1. 이용가치와 경제적가치의 불균등

어떠한 유형의 건축물을 막론하고 건축물이 지니

는 궁극적인 가치는 이용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간이용의 개념보다는 건축물을 통한 최대이익의 창출에 관심의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즉, 건축물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리성이나 안전보다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수익적 잠재력을 최대한 현실화시키는데 주력을 둔 경우가 보다 우세하게 작용하였다.

특히 도시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지하와 지상으로 심층화·고층화 되어 왔다. 그리고 시장성을 겨냥하여 단일용도의 건축물보다는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 한 공간 내에 존재하는 다중복합건물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이것은 건축주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높인다는 점 외에도 이용객이나 거주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다. 일반적으로 복합건물은 단일용도의 건축물보다 위험성이 증가한다. 위험도의 산출에 포함시켜야 하는 변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의 변수는 단순히 양적증가 뿐만 아니라 고려해야 할 변수간의 역학적인 난이도도 증가시킴으로써 산출의 적정성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그 위험성은 배가된다. 최소한의 기준으로 마련된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작은 사고원인에도 불구하고 대형사고로 진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경제적 가치보다는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이용가치의 비중이 낮게 고려됨으로서 발생하는 불균등 현상은 안전을 담보로 하는 경우가 많아 위험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2. 책임과 의무의 망각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은 특정인을 지정할 필요 없이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당해 건축물의 관계자, 즉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주어진다. 또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들로부터 책임 소재의 규명이 시작되기도 한다. 그러나 일부 이러한 책임성을 망각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건축물 관계자의 경우 안전관리를 선택사항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결과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나 행정명령 등에 대하여 근본적인 거부감을 갖기도 한다. 간단한 예로 화재위험성을 지적하여 시설개수명령과 같은 행정명령을 발부할 경우 “왜 사유 재산에 대하여 국가가 간섭을 하느냐”고 어처구니없는 항변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잘못된 발상이며 인식상의 중대한 하자이다.

건축물의 관계인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들이 책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3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이다. 건물 임차인은 물론이고 출입자나 이웃에 대하여 큰 피해를 주기 때문인 것이다.

기본적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국가에 부여한 기본적인 의무이다. 따라서 국가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 시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가스시설을 위험하게 관리하여 폭발사고가 났다면 그 건물은 물론 인근건물에 까지 피해를 줄 것이고 심지어는 근처를 지나던 보행인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내 것 이라는 편협한 소유개념이 집착하게 되면 타인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가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겪었던 대형사고의 결과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3. 도덕과 규제의 혼돈

일반적으로 규제는 정책의 3대 분류에 해당할 정도로 중요한 정부정책 유형의 하나이다. 특히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원화 될수록 정부규제의 종류와 강도는 높아지기도 한다. 특히 과거에는 중요시되지 않던 분야가 새로이 규제행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대폭 강

화되기도 한다. 그러나 규제행정은 대다수의 국민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아무에게도 부담을 부여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규제행정은 단 한가지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제행정에 대해서는 저항이 필수적으로 동반되며 규제를 당하는 사람들은 이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력 까지 동원하여 막으려고 한다.

규제가 필요한 사회문제가 정책의제(Policy Agenda)로 형성되는 과정이 정부주도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중요한 사건이나 위기가 발생한 이후 저항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책문제화 되고 집행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리 예측하여 정책을 수립하기 보다는 문제가 발생한 이유치유적인 해결방안으로서 정책이 수립된 경우가 많다. 환경이나 안전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고 새로운 정책이 입안된 사례를 보더라도 사전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드라이브를 전개한 것 보다는 사후적인 정책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우리사회는 안전 분야를 그동안 규제행정적인 개념에서 다루어 왔고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규제의 합리성 보다는 규제의 양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는 것이다. 규제의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며 국민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높고 효과가 적절할 것인가를 심사하고 평가하기 보다는 규제의 양적인 측면을 축소시키는데 초점을 두다 보니 알맹이는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 규제의 순응도와 효과성 측면에서 모두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안전은 규제라기 보다는 사회적 규범으로서 도덕적인 측면이 강하다. 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안전이 필요하지만 제도적인 규제는 모두를 공공의 규범인 것이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면 좀 더 빠르고 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정해진 횡단보도 외에는 통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규제인 것이다. 즉 규제라기 보다는 규범으로서의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4. 결과위주의 전시성 안전관리

공·사 부문을 불문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집행만큼 중요한 것이 결과의 측정 또는 평가와 환류(Feedback)이다. 그러나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에서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의심되는 정책들이 전시적 효과에 치우친 나머지 수정이나 발전적 검토 없이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감사를 의식하여 부실한 부분을 감추고 실적위주의 산술적 결과물만 양산하기도 한다. 민간부문도 마찬가지이다. 법적인 구속을 피하거나 대외적인 광고효과를 위하여 효과성에 대한 검토 없이 실적만 우선하는 경우가 있다.

한 예로 근로자 안전교육 시 안전교육 실시전과 후의 태도나 안전도 변화는 측정하지 아니하고 교육을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번을 실시한 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많은 근로자들이 교육후의 태도나 능력변화는 2차문제로 하더라도 교육을 받은 내용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또한 시설점검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시설점검표를 만들고 매일매일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설의 불량사실을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은 간과하고 시설점검표에 열심히 체크를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시설점검표에 체크를 한 사람조차 무슨 내용을 점검했고 그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III. 건축물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II 장에서는 우리나라 건축물안전관리의 문제점을 반성적인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아직 이러한 행태나 의식이 곳곳에 잔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도 발생하고는 있지만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

도 변화의 작은 싹이 트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다. 물론 그 양분은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아픔이었다. 소위 싹을 만큼 싹었지만 그 거름이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고 실험하기 위한 건실한 토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안전을 확보하고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노력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 우리나라가 안전선진국이 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평을 하여도 무리가 없을 정도이다.

이러한 변화는 앞에서 반성하였던 것과는 다른 패러다임이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 건축물안전관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방향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사례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생명이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공간인식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 건축물은 생명체가 아니다. 그러나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생명체와 별다르지 않다. 우선은 신생→성장→노화→소멸하는 성장단계가 생명체와 일맥상통한다. 물론 건축물에 성장 단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으나 환경변화나 이용목적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하거나 증·개축하는 것을 성장단계로 보아도 무난하다고 본다. 특히, 건축물은 고정되어 있는 구조부의 집합체로서 뿐만 아니라 움직이는 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원시시대의 자연동굴이 아닌 이상 그 복잡성을 떠나 모든 건축물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적절하게 가동될 때 그를 이용하는 인간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건축물에 인간을 닮고자 하는 지능형 시스템들이 증가하면서 그 정도는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의 변화가 대형건물을 중심으로 서서히 일어나고 있으며 보유한 것으로 만족하던 시대는 끝

나고 최적화시키기 위한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는 것이다. 법령상으로 의무가 없다고 할지라도 필요에 의한 설비가 추가로 설치되고 불용상태는 아니지만 건축물 환경이나 목적에 맞게 새로운 설비의 교체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정기적인 진단과 아울러 우선순위를 정하여 긴급한 치료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람들의 건강관리와도 일맥이 통한다. 결국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안전도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이고 건축물의 수명자세를 증가시키기도 하는 것이다.

2. 비용과 투자에 대한 가치판단과 인식전환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안전시책 중에서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분야가 비용으로 인식하던 안전관리에 대한 지출을 투자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아직도 안전을 위한 지출을 소멸성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일부에서는 이에 대한 방정식적인 결과물까지 도출하고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곳들이 생겨나고 있다. 안전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다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이며, 도랑치고 가재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에 대한 얼마만큼의 투자가 어느 정도의 손실을 줄일 수 있는지를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예측하고 손실 외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이미지 상승이나 안정성 등의 간접효과 까지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2차 가공업을 하고 있는 00시멘트에서는 10억 투자 시 23억의 손실예방이라는 공식을 얻어내고 과감한 안전설비 투자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공공부문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현재 소방방재청이 주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안전대상의 제1목적이 민간자율적인 투자의 유도이다. 안전에 대

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예방하여 준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변화하고 있는 또 하나가 “왜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이해”이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은 안전관리를 마지못해서 또는 규제 때문에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었고 이로 인해 피해의식마저 갖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안전관리자 스스로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위험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나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은 마치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병법처럼 또는 스스로의 자기진단능력을 갖추게 함으로써 위험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3. 사실공개를 통한 학습효과의 증진

부실하거나 위험한 건축물을 촬영하려는 기자와 이를 필사적으로 막아대는 관계자간의 몸싸움을 종종 방송에서 접할 수 있다.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장면이 더욱 시청자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바라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동안 관계당국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한 질타를 하고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물론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고발이나 처벌 위주의 방식은 오히려 잘못을 감추게 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자발적인 시도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 대상자를 수동적이고 방어적으로 만들게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잘못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되 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칭찬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는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 있는 대한민국안전대상의 시상분야에 우수 관리상이 포함된 것은 매우 획기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시상은 화재가 발생하였지만 평상시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신속한 대처로 초기에 진압한 사례를 평가하여 시상을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는 “무재해, 무화재” 이런 걸로만 화려한 실적에만 의지하여 작은 실수조차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외국사람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안전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완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고는 반드시 일어난다. 근본적으로 완벽이란 있을 수 없는 안전관리 분야를 두고 사고를 단 한 건도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것은 오만이나 아이러니에 가까운 것이라고 말한다.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이고 그 가정은 언제나 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할 부분은 무사고가 아니라 한 두건의 사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얼마나 큰 대형사고로의 진전을 중단시켰으며 피해를 최소화하였고 동일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위험했던 경험을 공개하고 이를 통한 경험의 공유는 매우 큰 학습효과를 이룩할 수 있는 것이다.

4. 안전활동의 이벤트화와 안전공간의 미학

안전활동을 하면서 관리자나 관리대상자 모두에게 흥미를 유발시킬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힘들고 재미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안전활동이 본질적으로 재미없는 활동이어서가 아니라 흥미요소를 개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마치 아무 맛도 없는 빵을 주면서 몸에 좋은 것이니 많이 먹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동안 대부분의 안전활동은 다른 활동에 비하여 흥미유발요인이 매우 미약하였다. 간단한 예로 안전교육 시간

에 마지못해 참석은 하였지만 꾸벅꾸벅 졸고 앉아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서 시간을 때웠던 경험이 누구나 있는 것처럼 소위 지겨운 활동 중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안전활동에도 아기자기하고 오밀조밀한 그러나 그 효과는 매우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례로 부서별로 팀을 이루어 안전활동에 관한 연극을 만들고 역할연기를 하면서 사례를 발표하는 행사장에서는 웃음과 박수가 터져 나온다. 그리고 건물내부의 소방시설에는 예쁜 과일모양의 표지판에 사용법이 부착되어 있다. 복도와 사무실 벽에는 직원의 자녀들이 그린 불조심 포스터가 액자에 넣어져 걸려있고, 매달 개최되는 안전이벤트에서는 안전퀴즈대회가 열리고 우수팀에게는 영화관람티켓이 상품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풍경은 상상이 아니다. 이미 많은 사업장에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이처럼 안전도 재미있을 수 있고 아름다워 질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동참과 관심을 유도하기에 좋은 촉매제가 될 수 있다.

IV. 맺는말

이상, 살펴 본 바와 같이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 싹트고 있다. 과거의 통제와 처벌, 그리고 숨바꼭질 분위기에서 이제는 동참과 자율,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와 칭찬의 분위기로 변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게 이제는 안전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의 바탕위에서 그 기반이 견고해져야 한다. 건축물안전관리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결과적으로 유·무형의 이익을 가져옴으로써 건축물 본래의 목적과 가치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산적한 과제도 많다.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

다수의 소규모 건물들은 과거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경우도 많다. 본고에 기술된 내용들이 안전관리의 전 체를 바라본 조감도 아니고 미래의 예측도 아니다. 일부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의 양상을 조심스럽게 진

단해 본 것이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이제는 안전관리가 우리에게 필수적이며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전반에 인식되고 이를 위한 기술적·행동적 노력들이 집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화준 외(2003), 정책학원론, 서울:대영문화사
2. 소방방재청(2004), 2004년도 주요통계및자료
3. 소방방재청(2004), 제3회 대한민국안전대상 신청요강
4. 소방방재청(2004), 소방방재관련법령집(I, II)
5. 정재희 외(2003), 안전사회 이렇게 만들자, 서울: 나남출판
6. 충남소방안전본부·충남발전연구원(2002), 21C 충청남도 소방안전행정체제 구축방안 연구
7. 행정자치부 국가재난관리시스템기획단(200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설명자료
8. 행정자치부(2004),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9. 홍성태 역(1997),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서울, pp. 5~29